발표 시점 : 2015년 6월 19일 (금)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15년 6월 22일 월요일 조간부터 취급 가능합니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2015년 6월 21일 일요일 오전 11:00 이후부터 취급 가능합니다.)

제목 : 성장률 3% 위해 20조원 추경 필요하다

■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함.

■ 성장률 3% 위해 20조원 추경 필요하다

< 연락처 >

경제연구본부

홍준표 연구위원 (010-2003-6929, 02-2072-6214, jphong@hri.co.kr)

이준협 연구위원 (010-6728-9516, 02-2072-9516, sododuk1@hri.co.kr)

15-25(통권 646호) 2015.06.19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성장률 3% 위해 20조원 추경 필요하다

현대경제연구원

목 차

■ 성장률 3% 위해 20조원 추경 필요하다.

Executive Summary ····· i

1. 추경 편성 여론 확산 ····· 1

2. 추경이 꼭 필요한 이유 ····· 2

3. 성장률 3%를 위한 추경 규모 추정 ····· 6

4. 시사점 ····· 10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한 상 완 연구총괄본부장 (2072-6230, swhan@hri.co.kr)

□ 경제연구본부 : 홍 준 표 연구위원 (2072-6214, jphong@hri.co.kr)

이 준 협 연구위원 (2072-9516, sododuk1@hri.co.kr)

Executive Summary

< 요 약 >

■ 추경 편성 여론 확산

최근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추경이 꼭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고, 경제성장률 3%를 위해 필요한 추경 규모를 추정하고자 한다.

■ 추경이 꼭 필요한 이유

(경기침체 우려 확대) 2013년 2/4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이던 국내 경기는 2014년 2/4분기 세월호 충격으로 회복세가 잠시 멈추는 소프트패치에 빠졌다. 그 후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절벽(4/4분기), 수출 급감(2015년 1~5월), 메르스 공포(6월)가 겹치면서 더블딥(double dip; 경기 재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추경 요건인 '경기침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성장잠재력 훼손 우려) 실제GDP가 잠재GDP를 밑도는 마이너스 GDP갭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이력현상'이 발생해 성장잠재력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 마이너스 GDP갭 상태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내년까지 GDP갭이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추경 효과 극대화 여건 조성) 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풍부할수록 추경 효과가 커진다. 추경 자금 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구축효과'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6월에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5%로 추가 인하함에 따라 추경 효과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성장률 3%를 위한 추경 규모 추정

총 20조 원 이상의(약 22조 원) 추경이 필요하다. 작년 말과 같은 세수 결손에 따르는 재정절벽 발생 방지를 위해 약 10조 원의 세입 추경이 필요하다. 세입 추경 이외에도, 성장률 3.0% 달성을 위해서는 약 12조 원의 세출 추경이 추가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 시사점

메르스 대응을 넘어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경을 가급적 빨리 대규모로 조성하되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일회성으로 제한해야 한다. **첫째, 가급적 빨리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 빠른 추경 편성 결정으로 경제 주체들은 경기 회복에 대한 심리적 기대가 커져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둘째, 충분한 규모를 확보하고 민간소비 및 성장잠재력 제고 효과가 큰 부문에 투입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층 바우처 지급, R&D 투자 등에 추경을 편성할 경우 내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일회성으로 한정해야 한다.** 추경 편성과 동시에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수정·보완함으로써 시장 심리 안정화를 유도해야 한다. **넷째, 경기 회복을 위한 소비 여력 확충, 투자 관련 규제 완화 등 미시정책의 뒷받침이 병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세입 전망을 보수적으로 하여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절벽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추경 편성 여론 확산

○ 최근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는 여론 확산

- 최근 기준금리가 인하된 가운데 메르스 공포가 커지면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1]을 편성하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음

· 한국은행은 2015년 6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성장경로의 하방위험이 커진 것으로 판단하여 종전까지 1.75%였던 기준금리를 1.50%로 인하

·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이던 국내 경기는 5월말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메르스 공포가 잦아들지 않으면서 메르스 대응 추경 필요성이 논의됨

· 국내 GDP갭률은 2012년 마이너스로 전환된 이후 올해에도 마이너스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유효수요 부족이 심각

- 추경 편성에 대한 반대론도 있지만 국내 재정건전성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

· 과거 일본이 추경을 실시했을 때 결과적으로 국가 부채가 증가했음

· IMF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4년에 35.7%로서, 한국을 제외한 OECD 평균 75.1%보다 현저히 낮아 재정정책 여력 충분

·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및 공적자금 상환원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9.5조 원 적자, GDP 대비 2%로 우리 경제가 감내할만한 수준

○ 추경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고 경기 침체를 방지하기 위한 추경 편성 규모를 추정하고자 함

- 세출 및 세입 추경 규모를 추정하고자 함

· 세출 추경 규모 : 경기 부진 지속으로 인해 성장률이 2% 중반으로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3%를 달성하기 위한 추경 규모

· 세입 추경 규모 : 재정절벽 재발 방지를 위한 세입 추경 규모

---

1) 추경은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예산으로 「국가재정법」 89조에 명시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편성 가능. 추경 편성 요건은 (1)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행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임.

2. 추경이 꼭 필요한 이유

○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추경 요건 충족

- 2013년 회복세를 보였던 국내 경기는 2014년 세월호 사건 및 재정절벽 등으로 소프트패치를 넘어 더블딥(재침체)까지 발생 우려

· 향후 경기가 재침체되는 더블딥 상황까지 발생하면 올해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3.0%)[2]보다 낮은 2.6%까지 떨어질 우려

-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 발생 이후 소프트패치에 빠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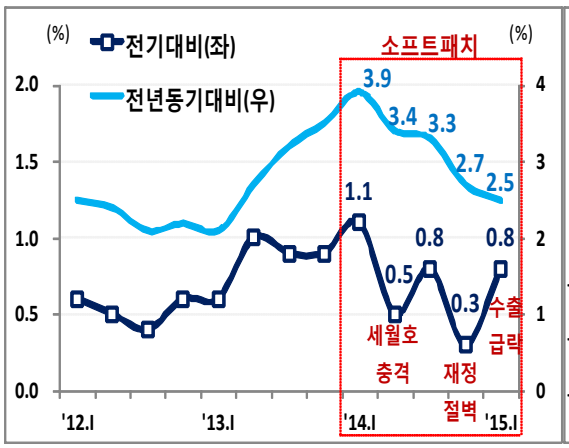
· 세월호 사건 이후 경기 회복이 일시적으로 후퇴하는 소프트패치에 빠지면서 이전까지 상승세였던 경제성장률(전기대비)은 2014년 2분기에 0.5%로 급락

- 2014년말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절벽 발생으로 4분기 성장률 재차 급락

· 2014년도 국세수입 전망은 216.5조 원이었지만, 실적은 205.5조 원으로 약 11조 원의 세수 결손 발생[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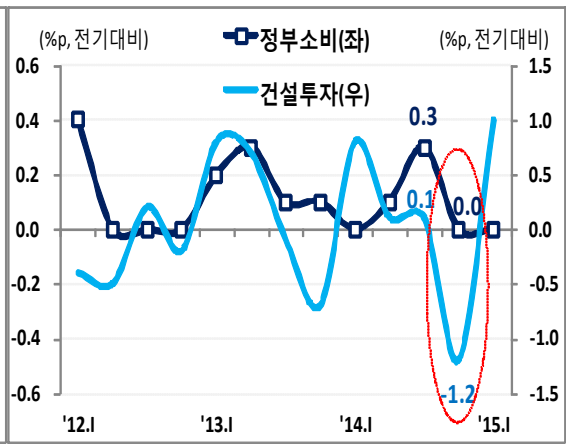
· SOC를 중심으로 정부소비 및 건설투자가 크게 감소하여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하락하면서 2014년 4분기 성장률(전기대비)은 0.3%로 급락

< 경제성장률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 정부소비 및 건설투자 부문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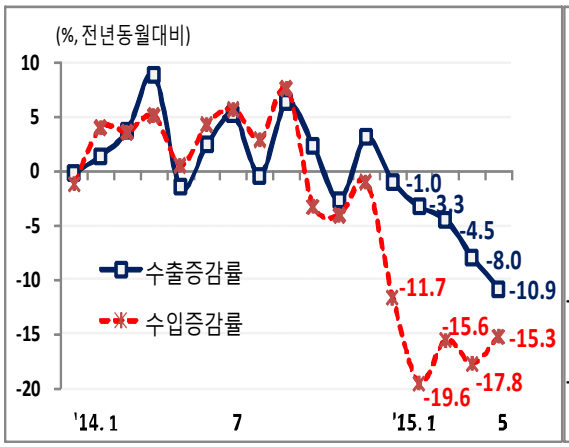
2) 현대경제연구원(2015년 6월), '적극적 경기부양 노력이면 성장률 3% 가능하다'.
3) 기획재정부(2015년 2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결과'.

- **수출 증감률이 5개월 연속 마이너스로 수출 경기 급랭**
  - 중국의 경기 부진과 엔화 약세 현상이 겹치면서 2015년 우리나라의 수출 증감률(전년동월대비)은 마이너스 폭을 확대
  - 국내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15년에 6%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소재·부품 등을 자체 생산하면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수요 감소 전망
  - 엔화, 유로화 대비 향후 원화의 고평가 가능성이 높아 이들 통화에 대한 가격 경쟁력 악화 전망[4)]

- **올해 5~6월 메르스 발생 및 확산으로 소비 위축 및 서비스 업계 타격을 받으며 소비 불안 심리가 경제 전반으로 퍼질 가능성**
  - 백화점 및 대형할인마트 매출액은 2015년 6월 첫째주 현재 전년동기대비 각각 16.5% 및 3.4% 감소
  - 문화 및 여가 생활 관련 소비 활동도 위축(부문별 6월 첫째 주 증감률, 전년동기대비 : 영화 관람객수 -54.9%, 놀이공원 입장객수 -60.4%, 박물관 관람객수 -81.5%)
  - 메르스 발생 이후 외국인의 한국 방문 취소가 늘고, 국내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도 취소되면서 관광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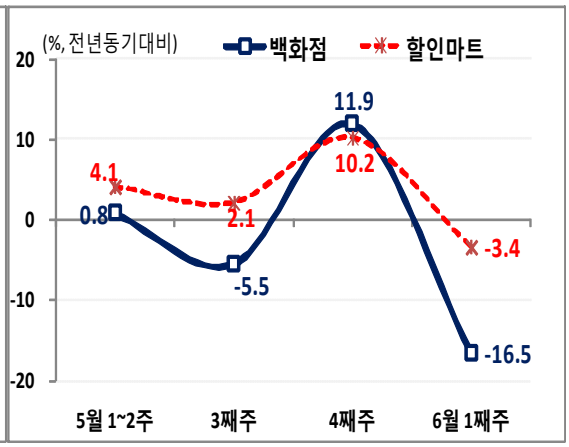
- **최근 더블딥(재침체) 우려 확산을 고려하면 추경 편성 요건 충족**
  - 「국가재정법」 89조에 따르면 '경기침체 우려'가 있는 경우, 추경 편성 가능

< 수출입 증감률 추이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판매처별 소비 증감률(2015년) >



자료 : 기획재정부(2015년 6월), '메르스 관련 경제동향과 대응방안'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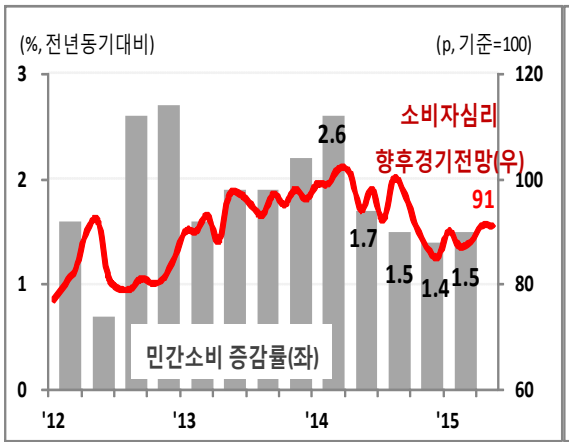
4) 현대경제연구원(2015년 5월), '최근 수출 침체의 요인별 분해와 시사점'.

○ 경기 침체 우려로 소비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민간소비가 1%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체감 경기가 악화되면서 경제 고통은 저소득층에 집중될 우려

- 소비자 심리 악화로 민간소비가 1% 함정에 빠질 우려
  - 소비자가 느끼는 향후경기전망CSI는 2015년 5월 현재 91p로 여전히 기준점(100p) 이하로서 향후 경기에 대해 비관적임
  - 특히 조사 시점(5월 11일 ~ 18일)이 메르스 확산 이전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하락폭 확대 가능성이 높음
  - 민간소비 증감률은 최근 4분기 연속 1%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1% 함정'에 빠져 경기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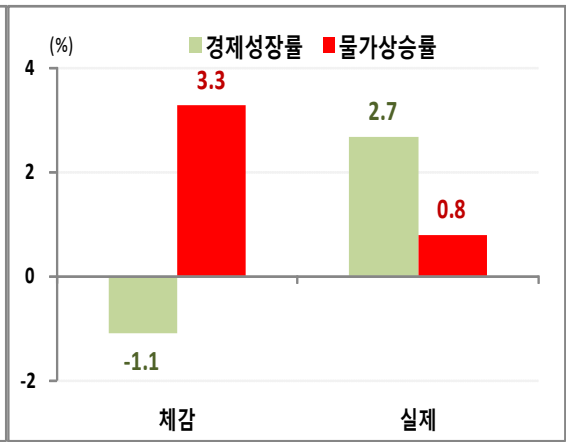
- 현재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기는 실제 경기보다 훨씬 부진하며 경기 침체의 여파는 저소득층에 집중될 우려
  - 현재 경제성장률은 3% 내외로 미약한 회복 국면에 위치하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대로 매우 낮은 수준 지속
  - 현대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5]에 따르면, 체감 경제성장률이 -1.1%로 후퇴하고 체감 물가상승률은 3.3%로 실제 물가상승률 0.5%(2015년 5월 기준)보다 높음
  - 동 설문조사에 따르면 저소득가구와 적자가구의 체감 경제성장률은 각각 -2.1%, -1.4%로 평균치인 -1.1%보다 낮은 수준

< 민간소비 및 소비자심리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 체감 경기 및 실제 경기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5) 현대경제연구원(2015년 4월), '최근 체감경기의 특징과 시사점'.

○ 성장률의 추세선 이탈 방지

- 성장률을 제고하여 추세선으로부터 이탈 방지

·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GDP갭률(=(실제GDP - 잠재GDP)/잠재GDP)은 2016년까지도 마이너스에 머물 전망[6]

· 마이너스 GDP갭률이 수년간 지속되면 잠재GDP까지 감소하여 성장률이 경제 위기가 없을 때의 추세선을 이탈하는 '이력현상(hysteresis)[7]' 발생 우려

○ 추경은 저금리 상황에서 매우 효과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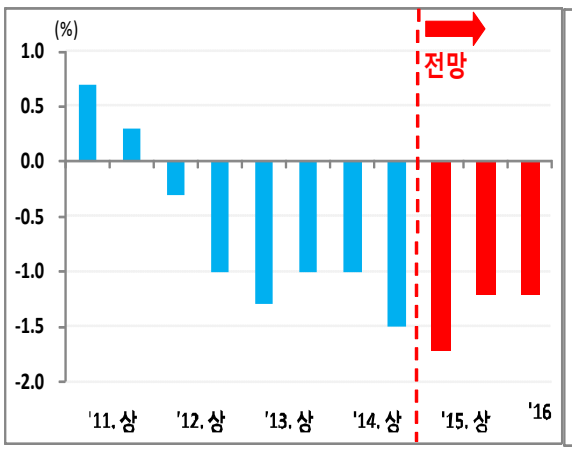
- 저금리 상황에서는 추경을 위해 국채를 발행해도 금리가 상승하여 투자가 위축되는 구축효과 발생 가능성이 낮음

· 2005년 이후 추경 편성(정부안 제출 일자 기준)이후 3개월간 국고채 3년물 및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각각 평균 0.27%p 및 0.29%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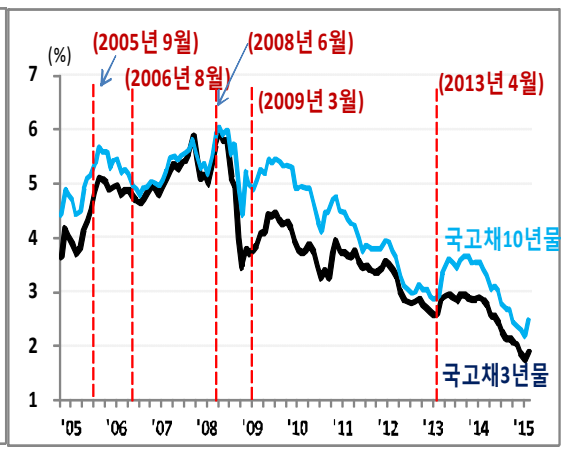
· 올해 추경 편성으로 상기 2종류의 국고채 금리가 과거 평균 수준만큼 상승한다고 해도 각각 2%초반 및 2% 중후반에 머물 가능성이 높음[8]

· 낮은 금리 수준일 때 재정 투입은 실물 경기 활성화에 더 효과적임[9]

< 국내 GDP갭률 추이 >



< 과거 추경 편성시 국내 국고채 금리 추이 >



자료 : 한국은행(2015년 4월),'경제전망보고서'. 자료 : 한국은행, 한국조세연구원.

6) 한국은행(2015년 4월), '경제전망보고서', pp 25.

7) '이력현상'은 물리학 및 공학에서 유래된 용어로서 어떤 값이 주기적 또는 어떤 범위를 갖고 움직였을 때, 출발지로 돌아오지 못하고 다른 값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말함. Laurence Ball(2014)은 '대침체를 경험한 국가들은 단기적인 경기변동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손상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력현상이 발생하여 잠재산출량 증가세마저 둔화되어 잠재산출량의 추세선이 경제위기가 없었을 경우의 잠재산출량 추세선을 따라가지 못하고 아래에 놓여있게 된다'고 지적.

8) 국고채 3년물 및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2015년 5월 현재 각각 1.88% 및 2.49%(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9) Woon Gyu Choi and Michael B. Devereux, "Asymmetric Effects of Government Spending: Does the Level of Real Interest Rates Matter?," *IMF Working Paper*, WP/05/7, 2005.

3. 성장률 3%를 위한 추경 규모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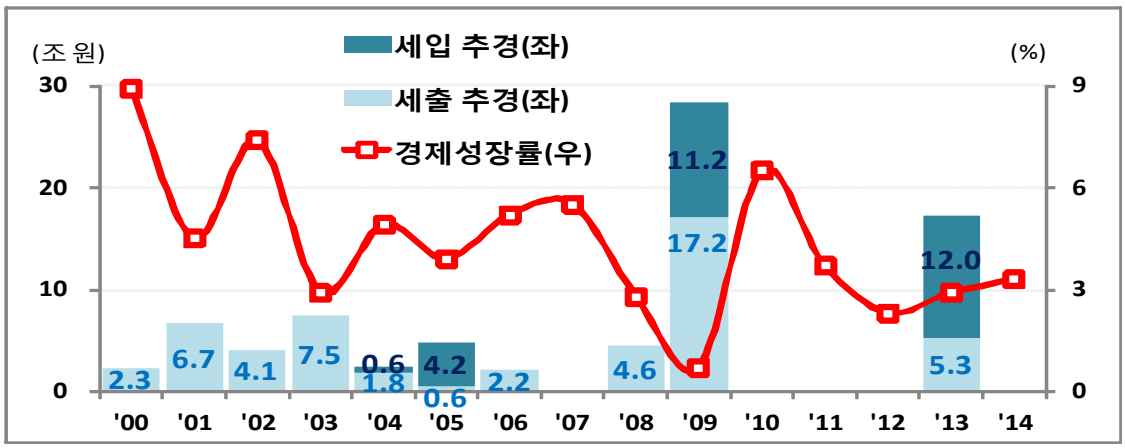
(1) 과거 추경 효과

○ 과거 우리나라는 추경을 통해 경기 부양 효과를 달성

- 2000년 이후 비교적 적절한 시기에 추경 편성을 통하여 경기 부양을 달성
  -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거나 미약했던 2001년, 2003년, 2005년, 2008년, 2009년, 2013년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이듬해에는 성장률이 상승했음
  -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경으로 해외 주요 선진국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가운데 한국 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하는데 크게 기여[10]

- 특히 긴급 상황 시 국회는 정부의 추경 예산안을 빠르게 의결
  - 2000년 및 2001년 1차 추경 편성시에는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 의결까지 각각 103일 및 73일이 소요됨
  - 메르스가 확산되는 올해와 같이 예상하지 못한 재해(태풍 '매미')가 발생했던 2003년 1차 및 2차 추경 편성시에는 정부의 추경 예산안 제출부터 국회 의결까지 각각 40일 및 22일이 소요됨
  - 2013년에는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4월 18일에 제출하고 국회의결(5월 7일)까지 19일 소요되는 등 긴급한 상황일 경우 패스트 트랙으로 추경 통과

< 연도별 추경규모 및 경제성장률 >



자료 :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연구원.

10) 현대경제연구원(2013년 3월), '추경의 시급성과 효과 극대화 방안'.

○ 최근 추경은 세입 추경 규모가 크고 세출 추경 투입 부문 중에서는 민생 안정 및 경기 활성화에 큰 효과를 거두는 부문이 중심이며 대부분 국채 발행으로 충당

- 2000년 이후 총 4회의 세입 추경을 시행하여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 결손을 보전
  · 2003년 카드 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등으로 국내 경기 침체가 심각했던 당시 국세 수입이 예산안보다 부족하여 세입 추경을 시행
  · 특히 2013년도 세입 추경 규모(12조 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경기 침체를 경험했던 2009년도 세입 추경(11조 2천억 원)보다 큼

- 최근 세출 추경은 실업 및 일자리 정책, 수출·중소기업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을 중심으로 편성
  · 실업 및 일자리 정책 부문에 투입되는 추경 규모는 2001년 400억 원, 2009년 2조 9천억 원, 2013년 1조 1천억 원으로 최근 들어 증가
  ·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추경 규모는 2001년 3천억 원, 2003년 7천억 원, 2004년 7천억 원, 2009년 4조 2천억 원, 2013년 9천억 원
  · 특히 2008년까지 지원이 없었던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에 2009년 3조 5천억 원, 2013년 2조 8천억 원이 투입됨

- 최근 추경 재원은 대부분 국채 발행으로 충당
  · 2000~2002년까지 추경 재원은 한국은행 잉여금 혹은 이전연도 세계잉여금에서 충당
  · 2003년도 2차 추경시 이미 1차 추경에서 활용가능한 모든 재원이 동원되어 불가피하게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 마련
  · 이후 추경 편성 시 재원의 약 2/3 이상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

< 연도별 추경예산(안) 재원 중 국채발행 규모 >

(단위 : 조 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8년	2009년	2013년
국채 발행	1.3	3.8	1.3	-	21.5	15.8
추경 규모	2.4	4.8	2.2	4.6	28.4	17.3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2013년 6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추경예산 편성 현황'.

(2) 올해 추경 효과

○ 올해 세입 추경 약 10조 원을 편성하여 작년말과 같은 재정절벽 발생 방지

- 작년 세수 부족으로 재정지출 감소 및 성장률 하락 등의 재정절벽 발생

· 2014년 4분기 성장률(전기대비)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분기(0.1%)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0.3%)을 기록

· 이유는 세수 부족(10.9조 원)의 영향으로 SOC를 중심으로 정부소비 및 건설투자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임

- 올해도 작년 수준인 약 10조 원 세수 부족 우려

· 올해 1~3월 국세수입 진도율은 22.7%로 역대 최악의 세수 결손이 있었던 작년(22.5%)과 유사한 수준[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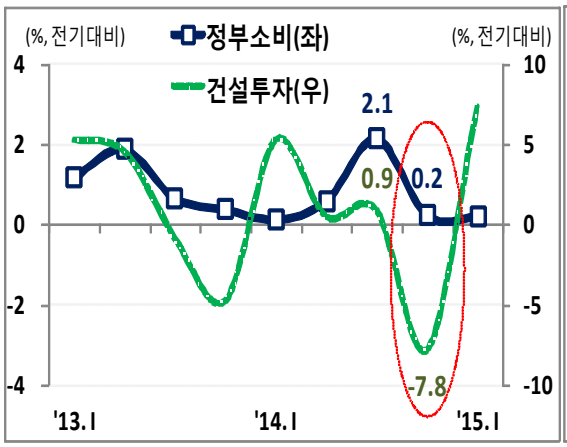
· 2015년 세입 예산안에 따르면, 경상성장률 6.1%(실질성장률 4.0%)을 토대로 국세수입은 221조 원 전망됨[12]

· 그러나 2015년 실질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보다 낮은 2.6%, GDP디플레이터 등락률이 작년 수준인 0.6%를 기록한다면 경상성장률은 3% 초반에 머물 전망

· 최근 2년간 국세탄성치[13]가 1 미만인 것을 감안하면, 2015년 국세수입은 2014년(206조 원)[14]보다 3% 미만 증가한 약 211조 원일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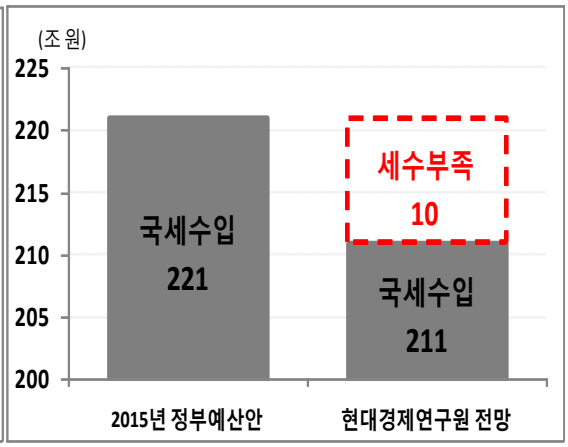
· 이는 정부의 2015년 국세수입 전망치 221조 원보다 약 10조 원 부족

< 정부소비 및 건설투자 증감률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 2015년 국세수입 및 세수부족 전망 >



자료 : 기획재정부, 현대경제연구원.

11) 기획재정부(2015년 5월), '월간 재정동향'.
12) 국회예산정책처(2014년 10월), '2015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13) 국세탄성치 = 국세수입증가율/경상성장률
14) 기획재정부(2015년 2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결과'.

○ 올해 세출 추경 약 12조 원을 편성하여 약 0.4%p의 경제성장률 상승 효과 도모

- **세입 추경을 하더라도 2015년 연간 성장률이 2.6%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어, 3.0%의 성장률 달성을 위해서는 약 12조 원의 세출 추경이 필요**
  - 현대경제연구원이 자체 추정한 재정지출승수(fiscal multiplier)는 0.498임[15)]
  - 이는 10조 원의 재정지출이 이루어질 경우, 실질GDP는 4.98조 원 증가함을 의미
  - 2015년 성장률의 0.4%p 추가 상승은 2014년 실질GDP인 1,426.5조 원 기준으로 5.7조 원의 추가 증가를 의미함
  - 5.7조 원의 추가적인 실질GDP 증가를 위해서는 재정승수의 역수배(2.0 = 1/0.498)에 해당하는 약 12조 원의 세출 추경이 필요함

< 현대경제연구원, KDI, 조세연구원의 재정지출승수 >

현대경제연구원(HRI)	KDI	조세연구원
0.498	0.384	0.482

자료 : 1) 현대경제연구원(2013년 8월), '추경의 시급성과 효과 극대화 방안'.
2) 허석균(2007년 11월),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
3) 조세연구원(2006년 9월), '세입과 세출의 변화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분석', 『재정포럼』.

- **세출 추경은 경기 부양 효과가 크고 특히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민간소비 활성화 부문에 우선적으로 투입**
  - 민간소비 증가율이 1% 함정에서 탈출하여 2%대까지 상승한다면 내수 경기도 살아나고 경제성장률 3%도 동시에 달성 가능
  - 민간소비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 및 '교육' 분야에 대한 지출 확대[16)]
  - 특히 '보육·가족·여성', '노동' 관련 분야에 대한 지출은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해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하는데 기여
  -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TFP)을 높이기 위한 기술혁신, 인적자본의 확충, R&D 투자 확대 등의 분야에 투입

15) 재정지출승수 추정 모형 및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재정지출 승수 모형' 참조.
16) 박승준(2009년 4월), '재정확대의 거시경제적 효과분석: 분야별 재원배분을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경제현안분석』, 제39호.

4. 시사점

○ 세수 결손을 보전하고 3% 성장률 달성을 위해 총 22조 원의 추경 시급

- 메르스 공포가 언제 잦아들지 모르고 불안 심리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현 상황에서 이번 추경은 메르스 대응뿐만 아니라 경기 부양의 효과까지 거두는 규모 확보

○ 추경은 정책효과가 지연되지 않도록 가급적 빨리 대규모로 조성하되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일회성으로 제한

-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가급적 빨리 추경 투입
  · 추경 편성 시기와 투입 시기 사이의 시간 차 효과(time lag effect)를 고려하여 빠른 시간내에 추경 편성을 결정하고 국회 의결 확보
  · 빠른 추경 편성 결정은 각 경제 주체들에 대해 경기 회복에 대한 심리적 기대감을 고조시킴으로써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 경기 회복력 강화를 위해 충분한 규모를 확보하고 경기 부양 효과가 큰 부문에 추경 투입
  · 민간소비 제고 효과가 큰 노동, 보육, 가족 및 여성 분야 예산을 확대 편성
  · 특히 영세자영업자 지원, 저소득층 바우처 지급 등 민간소비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추경을 편성할 경우, 민간소비가 '1% 함정'에서 벗어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직업 훈련 및 취업지원 등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 부문에 투입
  ·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 노인가구를 위해서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공적이전소득이 제공되는 소득재분배 정책 확대
  · 현재 건설경기는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민간부문이 활성화되어 있는 만큼, SOC 등 건설부문 추경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일회성으로 한정**
  - 단기적인 재정확대를 시행하는 만큼 장기 재정건전성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이 필요
  - 추경 편성과 동시에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수정·보완함으로써 시장 심리 안정화를 유도
  - 기금 여유자금 활용, 기관 경상경비 및 불필요한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추경 재원 마련시 가급적 국채발행을 최소화

- **소비여력 확충, 투자 관련 규제 완화 등의 경기 회복을 위한 미시정책의 뒷받침 필요**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축소, 최저임금제 내실화, 기업의 배당 확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한계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 등으로 소비여력 확충
  - '5대 유망 서비스 산업(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육성을 통해 소비 여력이 충분한 고소득층의 서비스 관련 소비 확대를 통해 내수 경기 활성화 달성
  - 환율 및 해외 수입 수요 감소 등에 타격받을 우려가 있는 중소·수출기업 대상으로 금융 지원 확대
  -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투자 활동에 제약이 되는 규제 조항들을 완화하고 세제 지원 등을 통해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들의 투자 확대 유도

○ **세입 전망을 보수적으로 하여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절벽 재발 방지**

- **보수적인 세입 전망을 통해 세월호 사건이나 메르스 확산 등 예상못한 경기 하방 리스크 발생에도 세수 부족 최소화 가능**
  -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세수 부족은 결국 경기 회복을 과도하게 낙관하기 때문에 발생하므로, 보수적인 경기 전망 및 세입 전망이 필요
  - 만성적인 세수 부족이 발생하면 재정절벽 방지를 위해 매년 추경 편성의 필요성도 높아져 결국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 또한 급격한 세수 감소 예방을 위해 세입 기반 약화를 방지하는 등 신중한 세수관리 정책 시행

경제연구본부 홍 준 표 연 구 위 원 (2072-6214, jphong@hri.co.kr)
이 준 협 연 구 위 원 (2072-6219, sododuk1@hri.co.kr)

<별첨>. 재정지출 승수 모형

□ 현대경제연구원 분석 모형 및 결과[17]

○ (분석 모형) 현대경제연구원은 Barro and Redlick (2012)의 방법론을 토대로 한국의 1980년부터 2012년까지 연간 데이터를 이용하여 재정승수를 추정함

- Barro and Redlick (2012)의 모형에 해외부문의 충격을 추가하여 재정지출 승수를 추정
  - 우리 경제의 높은 해외의존도를 고려해 볼 때 해외부문의 충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므로, 해외부문의 충격을 대표하는 변수로 미국의 1인당 실질 GDP를 추가
  - 방정식 (1)에서 y는 일인당 실질 GDP, g는 일인당 실질 정부 지출, τ는 GDP에서 차지하는 조세수입 비중, U는 실업률, y^{US}는 미국의 1인당 실질 GDP로서 해외부문의 충격을 나타냄을 의미

$$(y_t - y_{t-1})/y_{t-1} = \beta_0 + \beta_1(g_t - g_{t-1})/y_{t-1} + \beta_2(\tau_t - \tau_{t-1}) + \beta_3 U_{t-1} + \beta_4(y_t^{US} - y_{t-1}^{US})/y_{t-1}^{US} + \epsilon_t \quad (1)$$

○ (분석결과) 경기부양용 정부지출 증가에 따른 실질 GDP 증가는 재정지출 증가분의 약 50%로 추정됨

- 본 연구원이 자체 추정한 재정지출승수(fiscal multiplier)는 0.498임
  -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조세연구원(KIPF)이 추정한 재정지출 승수는 각각 0.384, 0.482임

< 현대경제연구원, KDI, 조세연구원의 재정지출승수 >

현대경제연구원(HRI)	KDI	조세연구원
0.498	0.384	0.482

자료 : 1) KDI,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 제29권 제2호, 2007.
2) 한국조세연구원, '세입과 세출의 변화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분석', 『재정포럼』, 2006.

주 : 1) 현대경제연구원 재정지출승수의 t값은 2.39(5% 유의구간에서 유의), Adj. R-square 0.50임.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더미변수로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추정.
2) KDI(2007) 연구에 따르면 정부지출이 한 단위 변했을 때 실질 GDP 변동분은 2분기까지 0.384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3) 한국조세연구원(2006) 연구에 따르면 정부지출이 한 단위 증가에 따른 실질 GDP 변동분은 3분기까지 0.482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17) 현대경제연구원(2013년 3월), '추경의 시급성과 효과 극대화 방안'.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책처, '2015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2014(10월)

박승준, '재정확대의 거시경제적 효과분석: 분야별 재원배분을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경제현안분석』, 제39호, 2009(4월).

한국개발연구원, '최근 국세수입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KDI경제전망』, 2015(5월).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15(4월).

한국조세연구원, '세입과 세출의 변화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분석', 『재정포럼』, 2006(9월).

한국조세연구원,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추경예산 편성 현황', 2013(6월).

허석균,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한국개발연구』, 제29권 제2호(통권 제100호), 2007(11월).

현대경제연구원, '추경의 시급성과 효과 극대화 방안', 2013(3월).

현대경제연구원, '5만 달러 국가의 조건', 『경제주평』, 15-01(통권 제622호), 2015(1월).

현대경제연구원, '적극적 경기부양 노력이면 성장률 3% 가능하다', 『경제주평』, 15-23(통권 제644호), 2015(6월).

Alan J. Auerbach and Yuriy Gorodnichenko, 'Measuring the Output Responses to Fiscal Policy',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2012, Vol. 4(2), pp1-27.

Barro, H. Robert and Carles J. Redlick, 'Macroeconomic Effects from Government Purchases and Taxe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6, 2011, pp. 51-102.

Laurence Ball, 'Long-term Damage from the Great Recession in OECD Countries', *NBER Working Paper*, No. 20185, 2015.

Woon Gyu Choi and Michael B. Devereux, 'Asymmetric Effects of Government Spending: Does the Level of Real Interest Rates Matter?', *IMF Working Paper*, WP/05/7, 2005.